

“광주 자치구 경계조정 시민 여론수렴 먼저”

광주시 일방적 주도에 지역민 반발 ... 정치권 지나친 개입도 경계 미래발전 위해 소지역 이기주의 탈피를 ... 시, 장단점 적극 알려야

광주의 균형 잡힌 미래발전 동력이 될 자치구간 경계조정이 여론수렴 단계부터 좌초 위기다. 광주시는 초반 논의 과정부터 뼈대없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대승적 협력을 요청하고 있지만, 광산 지역민과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반대의견이 거세다.

이를 놓고 일각에선 관내 '민원 발생시절'인 광주 공공항의 타지역 이전에는 적극적인 광산구가 공동 현안에 대해선 지역 이기주의에 매몰돼 지역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며 굵직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지역 시민사회에선 '자치구간 경계조정은 시민 중심의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며 정치권의 과도한 개입이나 광주시의 일방적인 리드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9일 출입기자들과 차담회에서 2년만에 재개한 광주 자치구간 경계조정 논의와 관련해 "국가 균형발전이 중요한 것처럼 광주 내부적으로는 5개 구간 균형발전도 중요하다"며 "현재 논의중인 구간경계조정안은 모두 (제가) 시장이 되기 전 이뤄졌고, (조정 과정은) 힘든 일이고 인기를 얻는 일도 아니지만 지역 미래를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2018년 말 중단된 논의를 최근 재개한 것은 광주의 미래를 위해 계속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 때문"이라며 "지금 준비 기획단의 견주 수렴을 시작하는 단계로, 다양한 틀에서 여러 의견들이 충분히 논의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준비 기획단에서 최종 개편안을 마련해 시에 건의하면 이를 바탕으로 정치권, 구청장들과 논의할 것"이라며 "더 살기 좋은 광주를 위해 대승적 협력을 부탁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경계 조정에 협력하는 구청과 주민에 대해선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시장은 또 "자치구간 경계 조정은 밀어붙여서 될 일도 아니고 현행법상 해당 자치구에서 건의하지 않으면 진행될 수도 없다"며 "시작 단계에서부터 논의 자체를 가로막는 것은 옳지 않으니 냉철하고 합리적으로 논의에 참여해주길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이 시장의 이날 발언은 최근 광산구를 중심으로 의원과 주민이 성명을 발표하는 등 논의단계부터 반대 여론이 표출된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광주지역 정치권에선 광주 구간경계조정을 둘러싸고 국회의원간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구간경계조정 일부 안에 대해 광산지역 이용빈(광산갑)·민형배(광산을) 국회의원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민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첨단1·2동의 북구 편입을 골자로 하는 광주시 구간경계조정 2안(중폭)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비공식 주민 투표까지 강행했다. 이 의원도 해당 지역구는 아니지만 첨단 1·2동의 북구 편입에 반대 입장으로 보이고 있다.

현재 운영덕(동남갑)·이병훈(동남을)·송갑석(서구을)·조오섭(북구갑)·이형석(북구을) 의원 등 5명은 2안에 찬성 의견을 밝혔고, 양항자(서구을) 의원은 "구체적 방법은 다시 고민하자"는 의견을 냈다. 광주지역 국회의원 8명이 2안 찬성 5명, 2안 반대 2명, 유보 1명으로 나뉘고 있는 셈이다.

특히 민 의원은 지난 8일 첨단2동 삼삼공원에 '찾아가는 민심당사' 부스를 열고, 스티커 투표 방식으로 '자치구간 경계조정'에 대한 긴급설문을 진행했다. 이날 설문에는 400여명이 참여해 북구 편입 찬성 15명(3.75%), 반대 380명(95%), 첨단구 신설 등 중립 4명(1%)을 기록했다는게 민 의원의 설명이다.

민 의원은 비공식 투표지만 주민의 반대 의견이 압도적이었던 점 등을 내세워 광주시의 구간경계조정 논의 반대운동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광주대포 시민단체인 참여자치21기우식 사무처장은 "일단 구간 경계조정 대상지역 주민들이 일부 반발하는 것은 이해가 된다"며 "이는 구간경계 조정이 각 자치구의 발전을 전제로 한 것이지만, 이런 것에 대한 비전 등이 제대로 소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기 처장은 이어 "구간 경계조정은 정치권이 아닌 시민과 시민사회가 주도해야만 지역 이기주의



“우리는 이대로 살고 싶다” 북구와 광산구를 중심으로 광주시 구간경계조정안에 대한 반발이 일면서 지역간 갈등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북구 풍향동 거리 곳곳에 '주민 동의없는 동구편입 결사반대'라는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가 내걸려 있다(위). 또, 광산구 첨단 1, 2동 거리에는 '우리는 이대로 살고 싶다, 북구편입 반대'라는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며 "광주시도 이제부터는 구간 경계조정에 대해 시민에게 장단점을 적극 알리고, 지역 정치인과 시민사회도 여기에 동참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시·전남도 '행정 통합' 용역 협의

내일 광전연에서 ... 민간공항 이전 여론조사 결과도 발표 '촉각'

광주시와 전남도가 오는 11일 행정통합과 관련해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광주전남연구원에서 첫 용역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같은 날 광주민간공항의 무안국제공항 이전 여부를 묻는 광주시민여론조사 결과도 발표될 예정이어서 시·도민의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3면>

광주시와 전남도가 생산적인 통합 논의를 통해 국가불균형의 시정과 지역 미래 발전의 초석을 마련

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가운데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양측이 상호 존중과 배려에 기반한 협의를 통해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9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시·도가 각각 잠정적으로 2억원의 예산을 반영해 광주전남연구원 용역 발주를 예정하고 있다. 용역 발주를 앞두고 11일 광주시 균형발전정책과장, 전남도

자치행정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전남연구원과 함께 용역 관련 첫 협의에 나선다.

향후 용역이 지역에 미치는 파장이 큰 만큼 광주시와 전남도가 용역 과업의 범위, 내용 등에 대한 양측의 의견을 조율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용역에는 행정통합을 포함해 경제협력공동체, 현 상황 유지 및 상생협력 강화 등 여러 대안의 장단점, 기대 효과, 방식, 시기, 시·도민 여론 수렴 절차 등을 제시하는 게 과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용역 기간은 1년이다.

연구원측은 용역의 무게감이나 중대성 등을 감안할 때 국내외 행정·조직·정책 분야 전문가들도 연구진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시·도에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 관계자는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중차대한 과제만큼 충분한 비용과 연구기간, 국내 최고의 전문가 참여 등이 필요하다는 점에 모두 공감했다"고 말했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난항을 겪고 있는 군 공항 이전과 관련 해법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 시민권익위원회가 11일 광주시민 2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국제공항 이전 여부 등을 묻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지역사회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결과에 따라 광주시와 전남도의 갈등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바이든측과 다방면 소통 남북관계 새 해법 모색”
문 대통령, 청와대 수보회의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후보의 대선 승리와 관련, "새로운 행정부를 준비하는 바이든 당선인 및 주요 인사들과 다방면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청와대는 내년 1월 20일 새 미국 대통령 취임식 이전이라도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체제를 목표로 바이든 당선인 측과 다각적인 접촉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또 "한미동맹 강화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에 어떠한 공백도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며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정착에 더 큰 진전을 이루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의 차기 정부와 함께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할 것"이라며 "한미 간 튼튼한 공조와 함께 남북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해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민주당 정부는 한국의 민주정부와 평화프로세스를 긴밀히 공조하고 협력해 온 경험이 있다"고도 부연했다. 이는 과거 '햇볕정책'을 추진한 김대중 정부와 빌 클린턴 행정부가 대북 문제에 머리를 맞댄 것을 언급한 것이다.

나아가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에서도 새로운 기회와 해법을 모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긴밀히 공조하되, 코로나19 방역 협력 등 남북이 소통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 역량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은 특히, "바이든 당선인이 강조하는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대응 정책은 우리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과 일치한다"면서 "이런 정책적 공통점이 코로나 이후 시대를 함께 열어가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도 희망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전남도교육청 비리 백태 보니 ▶6면

굿모닝 예향 - 싸목싸목 장흥 한바퀴 ▶18-19면



돌이온 KIA 심동섭 희망을 던진다 ▶22면

사랑과 감사의 66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0]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IOPE
RETINOL EXPERT
RETINOL 0.1%
NEW

2weeks
IOPE LAB

슈퍼레티놀

단 2주 만에 주름잡다

| 아이오페 레티놀 엑스퍼트 0.1% |

주름을 위한 당신의 노력을, 얼마나 효과가 있었나요?
이제, 주름보다 강한 슈퍼레티놀로
확실한 주름 개선 효과를 느껴보세요

레티놀은 아이오페

IOPE

만 40~50세 성인 여성 (연령 2019.09.16 ~ 10.17) 14명(광주전남연구원)에게
고객상담실 080-023-5454 | www.iope.com